



균형있는 통신정책 수립 시행

朴 成 得
(체신부 통신정책국장)

새해에는 우리 정보통신분야에 많은 발전적 변화가 예견되고 있다. 사회전반적으로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대내외적인 환경이 빠르게 변모하고 있으며 사회전반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체신부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장단기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정보화사회를 이끌어 나갈 핵심구조인 정보통신의 장기비전과 관리체계 정립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적인 구도하에서 보면 89년은 실질적으로 정보통신의 기반조성이 이루어지는 의미깊은 해라고 생각된다.

89년에 이루어질 가장 큰 변화중의 하나가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민영화일 것이다. 80년대에 들어서서 국가 직영체제에서 공사체제로 전환한 이래 우리나라 전기통신의 비약적인 발전을 선도한 통신공사가 새롭게 운영체제를 일신하고 민영화사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신에 따라 경영의 합리화와 능률의 제고를 통해 통신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서 다양한 서비스와 저렴한 요금으로 국민의 정보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통신공사의 민영화계획과 함께 전기통신요금의 인하요인을 발굴하여 요금정책에 반영하고 통신이용조건을 이용자 위주로 개선해 나가며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보급하여 국민생활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또한 전기통신법령을 개정하여 정보통신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자유롭게 함으로써 시장 경쟁원리를 도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체신부에서는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기로 방침을 결정하고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해에는 정보통신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정보통신사업 기반조성이 이루어지리라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진흥협회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전산망법에 의거해서 87년에 설립되어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를 회원으로 하고 있는 정보통신진흥협회는 그동안 기반조성에 주력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는 민간기업들이 DP·DB업뿐만 아니라 VAN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전산망사업자들을 협회에 적극 수용하여 우리 전산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체신부에서도 동 협회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그리고 국가기간 전산망사업 지원강화를 위해서는 그동안 추진되어온 행정 전산망용 주전산기 개발이 본 궤도에 들어서는 새해에는 목표시스템의 기본 시제품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한국전기통신기술협회를 중심으로 하여 민간주도로 표준화를 시행할 것이며 88년부터 추진해온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의 개정과 전산망 기술기준의 제정 등 법령정비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정보화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해 정보문화 확산사업을 본격화하고 컴퓨터단말기 대량보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한다.

88년에 일단 체제정립에 성공한 정보문화 확산사업의 경우 새해에는 정보문화의 달 행사의 내실화를 기하고 전문인력의 양성교육과 일반국민의 계몽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보통신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우선 첨단기술개발을 촉진하여 새해에는 대용량 전전자교환기의 실용시험을 할 계획이며 88년 개발에 성공한 4M DRAM에 이어 89년에는 16M와 64M DRAM의 개발이 관계부처 공동으로 착수될 예정이다.

또한 ISDN 기술개발과 2Gbps 급 광전송시스템 개발에도 많은 진전이 기대된다. 그리고 기술인력양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펼쳐나감은 물론 기술기준체제의 개편과 형식승인의 확대를 도모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정보통신의 국제협력도 강화하여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협력은 물론이고 쌍무협력도 적극 추진하겠다.

현재 정보통신시장개방 압력을 가해오는 일부 선진국과의 협상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국익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우리 정보통신사업의 해외진출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새해에는 통신공사가 민영화 됨으로써 기본통신분야에 민간요소가 주입되어 한층 활력이 더해지며, 그동안 회선 사용제도 완화조치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사업이 가능했던

정보통신분야에도 실질적인 민간VAN사업자들이 등장하는 등 민간의 창의력이 도입되어 사업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다.

89년은 통신사업의 민간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첫해로서 기록될 것이며 이러한 체제변화에 따르는 이익분배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신정책을 수립·시행해 나갈 것이다.



사회과학적 중장기 연구과제 개발

金世源
(통신개발연구원 원장)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가 단순히 산업사회를 잇는 하나의 발전된 형태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이와는 질적, 구조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사회의 모습을 띠는지에 관한 개념상의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현 여건의 근본적인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우선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본다면 정보·통신의 혁명은 민주화의 촉진, 계층간 격차의 해소 및 다원화 사회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또 경제적 차원에서 효율성의 제고를 통하여 시장구조의 개선, 소득분배의 형평, 복지증대, 자원절약 등 자본주의적 시장경제가 갖는 한계와 제약을 극복케 하여 줄 수 있다. 특히 최근 일본에서 하루가 멀다고 출간되고 있는 서적들을 들추다 보면 정보화 사회의 발전이 모든 부문에 걸쳐 구석 구석 질적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너무나도 절실히 느끼게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러한 낙관적인 견해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논리에 입각하여 정보화 사회의 밝은 측면만을 가정했을 때의 「바람」에 불과하며, 반대로 현재의 여건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다시 말

하여 문제는 정보화 사회를 어떻게 바람직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보화 사회의 추진과 관련하여 가장 큰 과제의 하나는 이와 같이 사회적 관심의 확대와 함께 이상적인 발전 방향에 맞추어 정보·통신산업을 적절하게 육성해 나가는 일이다. 한국의 경우 더구나 「정보사회」의 개념 자체부터 서구로부터 수입되었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 정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

통신개발연구원(KISDI)의 설립취지 역시 정보화 사회의 발전과 관련된 사회과학적 접근과 연구, 그리고 보다 좁게는 이를 위한 정보·통신정책의 대안·개발에 있다. 1985년 설립된 통신정책연구소(ICR)가 국회에서 특별법의 제정과 함께 88년 2월부터 통신개발연구원으로 확대·재편됨으로써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형평과 효율간 조화를 바탕으로 한 정보사회의 연구를 전담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보화 사회의 발전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국민복지의 증대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정책 대안의 수립 및 수행에는 한국적 여건과 또 사회적 수요가 반영되어야 함은 물론 동태적으로 그 방향의 설정 또한 근본